

벼랑 끝 신빈곤층이 늘고 있다

# 사회의 약자를 위하여

- 편집실 -

빈곤층이 '사회적 타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03년 인권 보고서'는 최소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생계조차 잇기 어려워,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하는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생계형 자살 하루 3명 꼴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의 분신을 시작으로 노동 현장에서 자살이 줄을 이었고,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녀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끌 내 던진 어머니의 비극도 그 원인은 가난이었다.

실제로 경찰청의 공식 집계만 보더라도 2003년 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 꼴에 이른다. 문제는 빈곤층이 과거에 비해 한층 구조화하는데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두텁게 형성된 빈곤층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문은 좁고 실업자는 양산되는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190만 명에게 하루하루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전체 은행고객 가운데 2%가 전체 은행 저축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 가족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노동의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른바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혜택은 노약자, 주부가장, 장애인 등 전통적인 빈곤층에 대한 제한적 지원의 한계 때문에 동반자살, 가족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부양의무자 등 수급 자격기준에 미달돼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이 190만여 명에 이른다.

300만 명이 넘는 실질 빈곤층이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 빈익빈 부익부 갈수록 심각

정상적인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16만 명, 해체가구 아동 34만 명, 저소득 가구의 자녀로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40만 명 등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도 546만 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서울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도 1,800여 건으로 2001년 341건, 2002년 594건

에 비해 급증했다.

2003년 7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도 335만 명(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엘지카드 위기사태 이후 신용카드회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로 100만 명 가량의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올해 말까지는 신용불량자가 4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 필요

김남근 변호사는 “IMF사태 이후 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산, 빈곤층의 출현, 빈부 격차의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경쟁요구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세금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통하여 회수하고 불법적인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 포괄주의를 통하여 회수하고 이를 빈곤층의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출처: 2003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